

# 與野, '정부책임론' 정면충돌...

尹  대통령실 이전  사적발언 논란  
文  탈북어민 복송  신재생에너지

국민의힘 태양광 등 前정부 실정 부각  
더민주 3고 등 민생대책 미흡 비판  
추가조작·후원금 등 수사 현황 공방



2022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서 관계자가 감사위원 자리에 관련 자료를 놓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복송,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탈원전 문제부터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제가 된 대통령실 이전, 윤석열 대통령 사적 발언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이 올해 국감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 삶과 밀접한 경제 상황이 악화한 데 따른 책임론도 나올 전망이다.

국회는 이달 4일부터 3주간 일정으로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한국 경제가 위기인 가운데, 여야는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국감에서 쟁길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 현안 입법도 쟁길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국민 삶이 위기에 내몰린 데 대한 '책임론' 문제도 국감에서 거론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

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부터 전임 정부 경제 정책 실패 사례 등을 비판하며, 현 정부 정책 홍보에 집중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방침이다.

이에 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함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 김건희 여사 추가조작 의혹 수사, 대통령실 이전 논란 등을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할 계획이다.

현재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

기와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붕괴가 촉발한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민생 대책 미흡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감이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는 만큼,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정부 비판에 집중할 방침인 셈이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 국감에서 대통령실 질의가 이뤄지는 만큼, 민주당은 윤 대통령 논란과 김 여사 관련 의

혹 문제 등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세에 맞서는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보여주기식 평화쇼'로 규정할 뒤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이어지는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책임론을 제기하는 셈이다.

외통위 국감에서는 윤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최근 미

국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에 정부가 부실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가 여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박진 장관 국감 출석 문제도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른다.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는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시도된 태양광·풍력 발전 확대 과정에서 환경 파괴 논란과 탈원전 정책에 따른 최근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을 집중 비판할 방침이다.

이 밖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경찰국 신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같은 경찰 수사 현황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경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논란 등을 두고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형준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네·카·라·쿠·배' 총수들 줄소환... 불공정·갑질 등 도마위

(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

공정위·정무위 등 다양한 부처 출석  
입점기업-운영주체 문제 언급 촉각

2022년 국정감사에 유통가 수장들이 대거 선다. 대형 유통채널 기업의 총수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다양한 '갑질 사건'과 관련된 곳에 불러 나올 예정이다.

한동안 쑥 들어갔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고개를 쳐드는 분위기다. 불려나오는 대형 유통채널 기업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뿐더러 이른바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로 불리는 초대형 빅테크 기업 총수들이 모두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른바 '온플법'으로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IT 빅테크 기업

들이 거대한 규모로 독과점할 때 여기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자, 납품·입점업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플랫폼 국감'으로 불리며 대대적인 논란이 일어나며 온플법이 대두됐고 문 정부 당시 이를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며 온플법 대신 기업에 최소·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 아래 '민간협의기구' 설립이 8월 논의되기 시작했다.

◆또다시 쿠팡 때리기? 물류센터와 각종 갑질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쿠팡은 5일 고용노동부 정종철 쿠팡폴필먼트 대표, 7일 정무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출석할 예정

이다. 정 대표에게는 물류센터 사고 예방과 고용 작업환경 개선 관련 질의가 있을 예정이며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질의가 알려졌다.

정무위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대상 국감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의장은 건강상 문제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어 박대준 대표이사가 출석하기로 했다.

박대준 대표이사는 정무위와 공정위에 출석하게 된 만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2일 공정위에서 받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내용을 공개한 것을 볼 때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과 자진 시정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쿠팡이 그동안 공정위에 신고당한 다양한 '갑질' 사례들과 지난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물거품 된 추징금 가치분 행정소송 항소한 것도 언급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명품 쇼핑 플랫폼 약관 논란' 최형록 발란 대표·박경훈 트렌비 대표

명품 온라인 쇼핑몰인 발란과 트렌비도 정무위 국감에 소환됐다. 보복소비 열풍을 타고 빠르게 성장한 명품 온라인 시장은 그동안 시장 규모에 비해 규제나 소비자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8월 공정위는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용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약관에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

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과도한 면제 등이 주요 쟁점이다.

◆복합쇼핑몰 잠정 폐쇄 중 관리비 부과...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서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 중인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는 인테리어 공사로 정상 영업을 불가능한 상태에서 입점 업체에 정상관리비를 부과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거래상 우월 지위를 이용했다는 게 쟁점이 된다.

한편 최근 유통가에서 백화점 이후 새로운 형태의 오프라인 채널로 떠오른 대형 쇼핑몰과 관련해 입점기업과 운영주체 간의 문제가 언급될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 환차익 명암 뚜렷... '원가부담→제품인상→소비위축' 악순환 우려

>> 1면 '수출 많은 車·조선...'서 계속

완성차 업계는 환율 상승으로 니켈, 구리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을 받아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완성차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시 달러로 지불하기 때문이다.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들의 원자재 수입가격도 함께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차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원가 부담을 이유로 기업들이 제품 가격에 전가하기 시작하면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품가 인상은 또다시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 약화로 나타나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원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쉽지 않아 설령 환차익을 보더라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은 지난달까지 협상된 내용으로 진행됐지만 10월부터 새롭게 인상되는 원자재 값을 적용할 경우 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 호재라는 명제 또한 옛말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 위축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조선업계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국내 조선업은 수출비중이 크고 기자재 국산화율이 높아 환율 상승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많다. 하지만 환율 상승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유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 조선업계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고환율에 따른 경기침체로 확대될 경우 선박 발주 모멘텀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로 이어진

다"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거나 신주선박 발주가 안될 수도 있는 대외적인 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비중이 큰 철강업계도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철강사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철강재 총 1537만3000톤을 수출했다. 전년 동기보다 4.3% 감소한 수치다. 최근 수요가 줄면서 철강재 가격도 내림세다. 수출 철강재 가격은 올해 1월 평균 톤당 1371.1달러였으나, 7월 1287.6달러로 6.1% 하락했다.

철강사 관계자는 "환율이 오르면 수입하는 철광석이나 스크랩(고철) 등의 원재료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그 자체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하고 있는 액화천가스(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

/양성운 기자

로는 큰 의미가 없다"며 "적정 제품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네, 강달러 현상이 오히려 수요에 부담으로 작용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